

# 당권 도전 정동영 공약 키워드는?

### “손에 잡히는 변화” 경제민주화 제도화 청년지도자 양성 등

민생개혁특별위원회·갑질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본사 불공정 행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해결 등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민주평화당을 혁신하고

당세를 보란 듯이 키우겠다”며 ▲청년 지도자 300명 양성 ▲청년·여성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출신 선발제도 도입 ▲정당보조금 5% 청년 정치활동에 지원 ▲각 대학별 민주평화당 대학생위원회 조직 ▲당원 20만 명 연

내 확보 ▲정책당원제 신설 ▲공직후보자 당원투표 선출 ▲당 회계 투명 공개 ▲현장중심 정당 건설을 위한 노동위원회·중소기업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지원 강화 등을 당 혁신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진성기자



민주평화당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동영(사진) 의원이 “민주평화당에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당 대표 후보자 공약을 발표했다. 정동영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동지들과 함께 보란 듯이 당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과 민생개혁·경제민주화의 제도화, 당 혁신과 당에 확장 등의 내용을 담은 당 대표 후보자 공약을 발표했다. 정동영 의원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연내 완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지역평등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분권형 개헌안 마련 ▲국민발안제 도입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또 “진보적 민생주의 노선으로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며 ▲



미국으로 향하는 5당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5당 원내대표들이 18일 오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 “기무사 계엄령 문건 형법상 내란음모”

### 천정배 의원, 입법조사처 질의 회신서 위험성 밝혀



모에 해당하는 다 할 것이나,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사진)의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대상문건은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자문 교수의 견해를 적시해 회신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다만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기무사 문건의 검토 내용은 “기무사에 부여된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며 “계엄령의 선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정 또한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또한, “합법적이지 아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군사력으로 헌법기관 및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고자 한 것으로 형법상 내란 음

모에 해당하는 다 할 것이나,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

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천정배 의원은 “군사보안기관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긴 위법행위”라며 “위수령과 계엄령의 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절차와 이유로 위수령 계엄령 선포를 제안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의 월권적인, 정치 중립에도 어긋나고 국기를 흔드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기무사 특별조사단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주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 “학교 폭력 등 환경개선 방안 마련해야”

### 도의회 교육위원회, 14개 시·군교육청 업무보고... 교육행정 적극성 주문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8일 임시회에서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학교폭력의 대응과 관심에 대해 “학교 울타리내에서 전문상담사가 수시로 학생을 상담해 초기대응과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이같은 노력과 관심이 자라나는 도내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학교폭력은 객관적이며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학교폭력 전문가를 배치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막고 학생들

이 보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도내 모든 학교가 미세먼지와 석면 해체·제거 등을 철저히 하고,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인 만큼 음식과 먹는 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급식의 질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최저가입찰로 인한 급식 납품업체 선정이 정답은 아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한 급식업체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김명지(전주8) 의원은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학교의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면서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공건축물을 세웠음에도 이를 학교가 폐쇄시킨다면 도민에 대한 무시이자, 폐쇄적인 교육정책이다. 이를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학교의 시설을 개방하라”고 강조했다. 진형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시간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면서 “특히, 학교에서의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 불법금융행위 규제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사진) 원내대표가 18일 ‘불법 금융행위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행위 등 전통적인 금융범죄와 함께 신변종 금융범죄까지를 포괄하여 규제하고 나아가 금융범죄 행위로 얻은 수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후 조치까지 포함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두 개의 법률을 통합 정비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권 부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 및 피해방지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실효적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확립을 도모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진성기자

## 이철희 의원 ‘경찰 정치개입 금지’ 법률안 발의

경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경찰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바로 세우 헌법과 민주질서의 수호자로 거듭 나야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때까지 현행법에는 경찰의 정치개입이나 관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에 의한 댓글공작과 인터넷 여론조작, 불법 사찰 의혹마저 사

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경찰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정치적 입력에 영향 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김병기·남인순·민홍철·박정·유동수·정재호·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이동성·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